

TPP 및 RCEP 논의 동향*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장)

1. 새로운 지역경제 통합의 흐름

1.1. FTA의 양적 증가

2014년 5월 현재 WTO에 등록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수는 370여개에 이르렀고, 2000년 이후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추진해온 우리나라도 현재까지 49개국과 12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 23개국과 9건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시작한 이래 이렇게 많은 FTA가 동시에 추진된 적이 없었으며, 특히 올해는 굵직굵직한 FTA들의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중 FTA는 7차 협상(2013년 9월 3일~5일, 중국 웨이팡)에서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였고, 2014년 1월 6일~10일간 중국 서안에서 제9차 협상을, 2014년 3월 17일~21일간 우리나라 일산에서 제10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한·중 FTA의 연내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와의 FTA는 작년 12월 4일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고, 올해 4월 8일 양국 통상장관이 정식 서명을 하였다. 또한, 지난 3월 11일 캐나다와도 FTA를 실질적으로 타결하였다. 뉴질랜드와의 FTA는 잔여 쟁점 타결을 위

* (chonghr@korea.kr 044-201-2061).

해 협상 중이다.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과의 FTA는 기존의 한·ASEAN FTA의 개방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현재 협상중이다. 한·인도네시아 FTA의 경우 작년 연말 타결을

표 1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 구분 | 상 대 국 | 추진 상황 | 농산물 수입('13년1) | |
|---------|-------------------|---|---------------|--------|
| | | | 수입액(백만 달러) | 비중(%) |
| 발효 및 타결 | 칠레 | · '99.12. 협상개시 → '04.4. 발효 | 383 | 1.6% |
| | 싱가포르② | · '04. 1. 협상개시 → '06.3. 발효 | 116 | 0.5% |
| | EFTA | · '05. 1. 협상개시 → '06.9. 발효 | 77 | 0.3% |
| | 아세안 | · '05. 2. 협상개시 → '07.6. 발효 | 2,741 | 11.5% |
| | 인도 | · '06. 3. 협상개시 → '10.1. 발효 | 994 | 4.2% |
| | EU | · '07. 5. 협상개시 → '11.7. 발효 | 2,808 | 11.8% |
| | 페루 | · '09. 3. 협상개시 → '11.8. 발효 | 59 | 0.3% |
| | 미국 | · '06. 6. 협상개시 → '12.3.15 발효 | 5,096 | 21.4% |
| | 터키 | · '10. 4. 협상개시 → '13.5.1 발효 | 57 | 0.2% |
| | 콜롬비아 | · '09.12. 협상개시 → '12.6.25 타결 | 75 | 0.3% |
| | 호주 | · '13.12.8. 실질 타결, '14.4.8. 정식서명 | 2,310 | 9.7% |
| | 캐나다 | · '05. 7. 협상개시, 13차례 협상 · 13.11.25~29 제14차 협상 개최 및 '14.3.11 실질 타결 | 417 | 1.8% |
| | (12건 49개국) | | | |
| 협상 중 | 중국 | · 공동연구('05. ~ '10.5), 공청회(2.24), '12.5.2 협상개시 선언 · 1차 '12.5.14 ~ 8차-'11.25~29, 9차-'14.1.6~10, 10차-'3.17~21 | 2,889 | 12.1% |
| | RCEP | · 아세안+6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선언('12.11.20) · 1차 협상 '13.5.9~13, 2차-'9.23~27, 3차-'14.1.20~24, 4차-'3.31~4.4 | 9,755 | 41.0% |
| | 인도네시아 ② | · 공동연구(1~3차, '11.7.9,10월), '12.3.28. 협상개시 선언 · 1차 '12.7.11~12 ~ 4차-'14.7.18~22, 5차-'9.8~13, 6차-'11.4~8 | 434 | 1.8% |
| | 베트남② | · 공동연구('10.6 ~ '11.10), '12.8.6. 협상개시 선언 · 1차-'12.9.3~4, 2차-'13.5.22~24, 3차-'10.16~18, 4차-'14.3.11~14 | 328 | 1.4% |
| | 한중일② | · 아세안+6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선언('12.11.20) · 1차 '13.3.26~28, 2차-'7.30~8.2, 3차-'11.26~29, 4차-'14.3.4~7 | 3,232 | 13.6% |
| | 뉴질랜드 | · '09.6. 협상개시, 4차례 협상 | 479 | 2.0% |
| | 멕시코 | · '07.12. 협상개시, 2차례 협상 | 67 | 0.3% |
| | 일본 | · 협상개시 및 중단('03.12 ~ '04.11(6차)), 협상재개 실무협의 10차례 개최('08.6~'12.6) | 343 | 1.4% |
| | GCC | · '08.7. 협상개시, 3차례 협상 | 29 | 0.1% |
| | | (9건 23개국) | | |
| 준비 중 | MERCOSUR | · 민간공동연구('05.5~'06.11) | 3,864 | 16.2% |
| | 기타 | · 말레이시아②, 러시아, 이스라엘, SACU, 몽골, 중미 | 1,053 | 4.4% |
| | 소 계 | (7건, 18개국) | | |
| 합계 | 28건 90개국(중복국가 제외) | | 23,047 | 96.9% |
| 농산물 전체 | | | 23,794 | 100.0% |

주: 국가수 및 수입액(비중)은 중복 미포함

주2: ②는 우리나라와 FTA를 중복 체결 또는 체결중인 국가를 나타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목표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년 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중인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의 FTA가 타결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의 농산물 수입 중 90% 이상이 FTA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2. 거대 FTA(Mega FTAs)

최근의 국제 통상환경은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의 약화, 새로운 형태의 무역자유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논의의 부상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핵심쟁점을 제외한 무역원활화, TRQ(Tariff Rate Quota) 관리 등 비교적 합의도출이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패키지를 타결하였으나 DDA 협상의 타결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기존 DDA 서비스분야 협상이 부진하자 미국과 호주가 주도하여 만든 복수국간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 Agreement, TISA)이 진행 중이며, 컴퓨터·반도체 등 첨단정보기술제품의 무역을 완전 자유화하자는 취지로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이 DDA 외곽에서 협상 중이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FTA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인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등 경제블록 성격의 거대 FTA 체결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ASEAN(1967년), NAFTA(1992년), EU(1993년), MERCOSUR(1995년) 등 대륙별 지역 경제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는 인접국간 상품교역 자유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제공동체로 출발하여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FTA를 통해 경제블록 성격의 거대 FTA 체결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대륙별 인접국간 경제통합 형태가 아닌, 대륙 간 경제통합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작년 2월 출범한 TTIP는 미국과 EU와의 FTA 협상이며, 양측은 세계 전체 GDP의 47%, 세계교역의 30%를 점유하고 있어, 이 협정의 타결은 세계 최대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TPP는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12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데, 이 협상참여 12개국은 세계 GDP의 38%, 세계교역의 28%를 차지한다. 2012년 11월 협상을 개시한 RCEP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ASEAN(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16개국이 참가하고 있으

며, 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 세계 GDP의 28%와 세계교역의 28%에 달하는 또 다른 거대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표 2 거대 FTA의 경제적 위상

| | 무역규모(2012년) | | 명목 GDP(2011년) | | 인구(2011년) | |
|------|-------------|-------|---------------|-------|-----------|-------|
| | 10억달러 | 대세계 % | 10억달러 | 대세계 % | 백만명 | 대세계 % |
| TTIP | 15,602 | 42.3 | 32,686.5 | 46.8 | 815.1 | 11.7 |
| TPP | 9,545 | 25.9 | 26,593.4 | 38.0 | 784.4 | 11.2 |
| RCEP | 10,470 | 28.4 | 19,929.9 | 28.5 | 3,387.9 | 48.6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원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2.1. TPP 협상 동향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P4)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 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의 순으로 참여국이 증가하여 현재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2008년 2월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TPP 협정에 나서는 주요 이유는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국제정치 및 안보 차원의 전략적 의도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¹⁾

당초 TPP는 예외 없는 모든 무역장벽의 철폐 라는 원칙하에 지금까지 2010년 3월 이래 19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하였고 2013년 9월부터는 2013년 타결을 목표로 수석대표협상과 각료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타결하지 못했다. 그리고 2014년 2월 22일~25일 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다시 협상타결을 시도하였으나, 상품 시장접근 및 규범분야 규율수준에 대한 입장차이로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협상타결 시도 실패

1) 시선집중 GSNJ_제 177호(2014.4.8), 위험한 TPP 참여, 임정빈

의 주된 이유로 일본의 쌀, 밀, 쇠고기, 돼지고기, 설탕, 낙농품 등의 민감품목과 미국의 자동차 관세철폐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들고 있다. 결국 TPP 협상의 향후 진전 여부는 일본과 미국 간의 핵심품목에 대한 합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미·일간의 협상은 4월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 계기에 진전을 도모하였으나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²⁾ 다만, 언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TPP 참여 선언 시 자국 국민에 대해 보호를 약속한 5대 민감품목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방향은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의 언론 보도를 정리해 보면, 일본의 5대 민감품목 중 쌀, 보리, 설탕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정 물량의 무관세쿼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상업적 이익이 상당히 큰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해 현재 양국이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협상중이라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쇠고기 관세를 한 자리 수 수준으로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20% 전후로 관세 감축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한편, 돼지고기에 대해 미국은 일본의 차액관세제도⁴⁾ 폐지 또는 차액관세제도를 유지하되 기준가격의 단계적 인하를 통해 관세를 0%에 가까운 수준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준가격 이상으로 수입될 경우 부과되는 관세율을 인하하는 양보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유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치즈 등 일부 유제품에 대해 관세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⁵⁾ TPP 참여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일간의 협상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우리 농업계는 미·일간의 협상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과 우리

2) 미일 공동 성명서는 미·일 TPP 양자 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in order to further enhance economic growth, expand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and strengthen the rules-based trading syste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committed to taking the bold steps necessary to complete a high-standard, ambitious, comprehen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greement. Today, we have identified a path forward on important bilateral TPP issues. This marks a key milestone in the TPP negotiations and will inject fresh momentum into the broader talks. We now call upon all TPP partners to move as soon as possible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conclude the agreement. Even with this step forward, there is still much work to be done to conclude TPP."

3) 2014년 4월 7일 일본은 호주와의 FTA 실질타결을 선언하였으며, 쇠고기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 38.5%에서 냉동육에 대해서는 18년간 19.5%까지, 냉장육에 대해서는 15년간 23.5%까지 관세를 단계적으로 감축기로 합의하였다. 즉, 냉동육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1년차에 6% 인하(32.5%), 2·3년차에 1% 인하, 4년차 이후에도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기로 하였으며, 냉장육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1년차에 8% 인하(30.5%), 2년차 2%, 3년차 1%, 4년차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대호주 수입량이 발동수준(냉장육: 13만 톤, 냉동육: 19.5만 톤)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관세(38.5%)를 부과(발동수준은 10년에 걸쳐 증량)기로 하였다. 다만, 일본이 향후 이 보다 개방수준이 높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결과를 적용한다는 미래 최혜국대우(MFN)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4) 일본산 돼지고기 가격과 비교하여 수입산 돼지고기의 가격이 낮을 경우, 기존 가격에서 수입가격을 뺀 만큼의 금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방식.

5) 일본 및 우리나라 언론 보도 내용에 근거하여 정리.

농업의 상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5대 민감품목 중 쌀의 협상 결과가 우리의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TPP의 특징과 관련 이슈들

2.2.1.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우선, TPP는 포괄적 시장접근과 WTO plus 수준의 규범 제정 및 조화를 목표로 한다.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분야까지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전반적인 WTO plus 수준의 규범 도입 및 노동, 환경, 경쟁, 국영기업 등 분야에서의 신통상규범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우리나라의 TPP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TPP 불참 시, 참여국 모두와 양자 FTA가 체결하더라도 역내 원료 공급망(supply chain)에서 상대적 특혜 폭 감소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또 한편에서는 TPP가 사실상 한·일 FTA로 자동차 등 제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최근 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오클랜드 대학 켈시 교수는 TPP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닌 국가의 정책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협정이라고 평가하였다.⁶⁾ 농업계는 TPP의 기존 참여국들이 대부분 농산물 수출강국임을 감안할 때, 결국 추가적·연쇄적 개방 확대로 이어져 국내 농업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TPP 참여시 쌀 시장개방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왔던 쌀 관세화 전환 여부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2.2.2. 복잡한 참여절차

TPP는 다른 양자 FTA와는 달리 특이한 참여 절차를 가지고 있다. 즉, 참여선언을 하기 전에 우선 관심표명이 필요하고, 그 이후 기존의 12개 회원국과 비공식양자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참여 조건을 협의한다. 이런 비공식양자협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참여를 결정하고 선언한다. 그 후, 공식 양자협의를 통해 기존 참여국별 참여조건을 협의하게 되고, 기존 참여국들의 컨센서스를 통해 승인을 받게 된다. 참여여부가 기존 참여국들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존 참여국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6) 2014년 4월 18일자 연합뉴스, “오바마 방한 앞두고 TPP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

7) 참여희망국가 “관심표명” → 기존 참여국과 참여 가능성 타진(예비 양자협의) → 참여희망국가의 참여선언 → 기존 참여국별 참여조건 협의(공식 양자협의) → 기존 참여국의 승인절차(컨센서스) → 참여희망국의 TPP 참여.

하는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이외 기존 참여국들의 국내절차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통상법에 근거하여 TPP 참여 희망국이 관심표명을 한 이후 자국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관보게제(Federal Register)를 30일간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적인 참여 승인 전에도 미의회 90일전 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1 TPP 참여 절차



자료: 미국 통상법, 언론 자료 등에 근거하여 정리.

현재 국내적으로는 TPP 참여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측에서도 TPP 협상 타결 전 참여와 타결 후 가입을 두고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속히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TPP내 규범제정 작업에 참여하여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이미 때늦은 참여를 하는 것보다는 그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헤쳐나가야, 서두르기보다 참여의 조건이 명확해지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⁸⁾ TPP 협상의 주도국인 미국은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TPP 협상 타결 후 가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한국의 TPP 관심표명 이후 관보게제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2.2.3. 협상의 폐쇄성 및 기존 합의내용의 무조건 수용

TPP는 협상내용의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참여 희망국은 협상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참여를 결정해야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TPP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는 참여 당시까지 기존 참여국간에 합의된 내용은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상품양허 이외 규범 분야에서 상당 수준

8) 임정빈. 2014. 위험한 TPP 참여. 시선집중 GSNJ_제77호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하며, 농업계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위생검역(SPS) 분야도 이에 포함된다고 한다.

TPP 협상 내용을 두고 국내적으로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는 상품양허 분야일 것이다. 특히, 양허협상 방식(공통 양허안 작성 vs. 개별 양허안 작성), 개방수준 및 양허제외 허용 여부 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농업분야와 관련하여 보조금 제도, TRQ 관리, 국영기업 등에 대한 규율내용, 수산분야의 경우 수산보조금의 철폐 여부 등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 작년 11월 29일 TPP에 대한 관심표명을 하였고, 현재 기존 12개국과 비공식양자협의 및 기술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3. TPP에 대한 국내적 논의동향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이래, TPP의 아·태 지역 최대 경제통합체로의 부상 가능성 및 참여국의 추가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TPP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차원에서 2013년 11월 29일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현재 우리 정부는 TPP 관심표명 이후 TPP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개시하여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파악해 나가고 있다. 또한, TPP를 둘러싸고 각 계의 찬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 11월 15일 공청회의 결과를 볼 때, 농업계에서는 시장개방 확대 요구에 따른 민감 분야 피해 우려로 TPP 참여에 반대 입장을 제기하였고, 제조업계는 전반적으로 TPP 역내시장 확보 및 일본과의 동등한 경쟁관계 확보 측면에서 TPP에 긍정적이나, 자동차, 기계 등 일부 업종은 대일 시장개방 우려로 TPP에 유보적 입장이다. 정부는 향후 예비양자협의 결과, TPP 참여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결과, 여론수렴 결과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우리의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3.1. RCEP 협상 개요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십(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한국, 중국, 일본,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의 지역 내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 동아시아경제통합의 논의 초기에는 중국의 주도로 아세안 10개국에 한·중·일 3국이 통합하는 형태인 동아시아 FTA, 즉 EAFTA(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가 추진되었다. EAFTA는 2004년 중국이 아세안+3개국 경제장관회의에서 제안, 추진되어 온 이래 2007년까지 제2단계 연구가 종료되었으며, 그 결과가 지난 2009년 8월 아세안+3 경제장관 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통합과정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견제하고자 아세안+3(한, 중, 일)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3개국을 다시 추가하는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East Asia)를 추진하였다. CEPEA도 2007년부터 일본 주도로 공동연구가 수행되어 EAFTA와 같이 2009년 8월 아세안+6 경제장관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⁹⁾ 이렇게 EAFTA와 CEPEA가 경쟁적으로 논의되자 2009년 10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EAFTA와 CEPEA의 병행 검토를 합의하였다. EAFTA와 CEPEA의 대립으로 동아시아 차원의 FTA 논의가 진전이 없자 아세안은 역내 FTA 논의에서 주도권을 되찾고, 역내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새롭게 RCEP을 제시하였다. 2011년 11월 제1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RCEP 구상(Framework)이 채택되어 2015년 말 타결을 목표로 2012년 11월 RCEP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RCEP 협상은 개시 선언 이후, 현재까지 4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¹⁰⁾

표 3 RCEP의 경제적 위상(2011년)

| 구분 | 국가 | 무역규모 (10억 달러) | 명목 GDP (10억 달러) | 인구 (백만 명) |
|------|------|------------------|--------------------|--------------|
| 한중일 | 한국 | 1,080 | 1,116 | 50 |
| | 중국 | 3,642 | 7,298 | 1,344 |
| | 일본 | 1,677 | 5,870 | 128 |
| | 소계 | 6,399 | 14,284 | 1,522 |
| RCEP | 아세안 | 2,395 | 2,154 | 609 |
| | 호주 | 515 | 1,488 | 23 |
| | 뉴질랜드 | 75 | 162 | 4 |
| | 인도 | 748 | 1,676 | 1,242 |
| | 소계 | 10,131 | 19,764 | 3,399 |
| TPP | 소계 | 10,185 | 26,604 | 785 |
| EU | 소계 | 11,719 | 17,611 | 504 |
| 전세계 | | 36,595 | 69,899 | 6,974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2.

9) 서진교, 2012. 동아시아지역 FTA 경합과 한국의 대응, 사선집중 GSInJ 제144호.

10) 제1차 협상(2013년 5월 9일, 브루나이), 제2차 협상(2013년 9월 23일~27일, 호주), 제3차 협상(2014년 1월 20일~24일, 말레이시아), 제4차 협상(2014년 3월 31일~4월 4일,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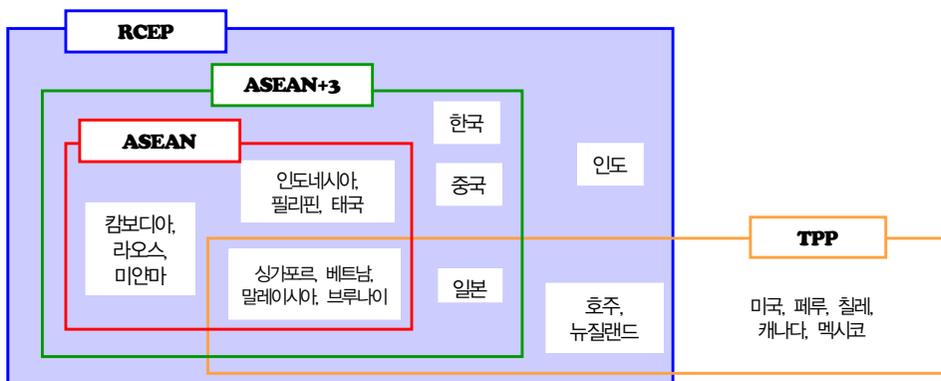
3.2. RCEP의 특징과 관련 이슈들

3.2.1. TPP와의 협력과 갈등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TPP와 중국 주도로 추진되는 RCEP의 대결구도가 형성된다. 중국의 RCEP 수용은 미국 주도의 TPP의 급속한 외연 확대를 통한 아시아 진입 강화 움직임과 이에 따른 일본의 TPP 참여 표명, 그리고 아세안의 역내 주도권 회복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EAFTA에 비해 아세안 중심의 RCEP 출범이 내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TPP 외연 확대를 통해 아시아 개입을 강화하려는 미국을 배제할 수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 이탈해 미국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일본을 잡아둘 수 있다는 고려를 한 것이라는 설명도 제기된다.¹¹⁾ 반면, 미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을 제치고 G2로 부상한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을 TPP 12번째 국가로 받아들였다.

한편,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은 양 거대 FTA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블록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결국 TPP와 RCEP이 완전한 대립 구도가 아님을 보여준다. 중국에 가서는 양 거대 FTA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거대 FTA를 모색할지도 모르며, 결국 이는 APEC이 추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of Asia-Pacific, FTAAP)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동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1) 서진교, 2012, 동아시아지역 FTA 경합과 한국의 대응, 시선집중 GSIn_제144호.

3.2.2. 타결 가능성

RCEP은 회원국 간의 이질성으로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 등에 대한 합의도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국가들 간에도 경제발전 단계가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RCEP 참여 16개국 사이의 경제력 차이는 더욱더 큰 상황이며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질성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RCEP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아주 낮게 평가하기도 하며, 타결 수준 또는 높을 수 없다는 전망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중·일 3국의 리더십 발휘 없이는 RCEP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3.3. RCEP 논의 동향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후 현재까지 1년간의 RCEP 협상의 성과는 한마디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FTA 협상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의 관세 자유화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원산지 등 FTA 협상에서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는 무역규범 분야의 합의 수준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은 가늠하기 힘들다. 이러한 RCEP 협상의 더딘 속도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RCEP 협상 참가국들의 경제 발전 정도 및 FTA 협상에서의 이익 추구의 구조가 매우 다양한 것이 큰 원인이며, 아세안 중심성을 강조하는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일본 등 지역경제 통합에서의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분산으로 뚜렷한 주도 세력이 없는 것이 또 다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RCEP 협상의 이러한 더딘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의 협상 과정을 통한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RCEP 협상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제협력, 원산지 등 무역규범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에 합의하였다는 점이다. 즉, RCEP 협상을 통해 상품뿐만 아니라 무역 규범 전반에 걸쳐 역내의 단일한 기준 설립을 위한 단초가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상품의 자유화 수준 협상에 있어 각국의 민감성과 서로 다른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TPP 협상과 비교되는 부분으로, 향후 상품 양허 협상 시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4차례 협상이 준비운동 기간이었다면, 이제 구체적인 협정문 협상을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RCEP의 구성 국가의 다양성 등 협상이 쉽지 않은 요인들에 불구하고, 앞으로의 1년 동안의 협상이 지금

까지와 어떻게 다르게 전개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이유이다.

4. 맺음말

2014년 갑오년은 우리나라 농업통상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는 한 해로 남을 것이다. 우선, 한·호주 FTA 정식서명 및 한·캐나다 FTA 실질 타결을 비롯하여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과의 FTA 타결 가능성도 높아 역사 이래 가장 많은 FTA를 타결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우리 농업계가 가장 큰 우려를 가져왔던 한·중 FTA도 타결을 목표로 급박하게 추진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쌀 관세화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이런 농업통상 현안들과 함께 우리 농업계는 TPP, RCEP 등으로 대변되는 지역경제통합의 흐름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적으로 TPP 협상 참여를 두고 찬반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도 참여의 실익과 손실에 대해 경제적인 분석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찬반 논의와 정부의 분석이 진정한 국익을 생각하면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동시다발적 개방으로 지쳐있는 농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C. L. Lim, Deborah K. Elms, Patrick Low. 2012.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CAMBRIDGE.
- 정인교. 2014. TPP에 참여할 것인가?: 협상의 실상을 보라. 시선집중 GSNJ_제173호.
- 임정빈. 2014. 위험한 TPP 참여. 시선집중 GSNJ_제177호.
- 서진교. 2012. 동아시아지역 FTA 경합과 한국의 대응. 시선집중 GSNJ_제144호.
- 산업통상부. 201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청회(2013.11.15.) 발표자료.
- 국회. 2014. TPP 공청회(2014.4.22.) 발표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4. FTA 농업분야 협상동향.

참고사이트

-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WTO (www.wto.org)